

내달 1일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5월 1일에 선고한다. 대법원은 오는 5월 1일 오후 3시 전 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결선고일을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형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후보가 지난 2020년 무죄를 선고 받은 공직선거법 사건도 대법원 전원

대법원, 오후 3시 선고
민주 “현명한 판결 기대”
이재명 “법대로 할 것”

합의체에서 결론이 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상식에 맞는 판결을 기대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일자가 오는 5월 1일로 잡혔다”며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죄 판결을 확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진태 법률대변인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 무죄 확정 판결을 확인한다”며

“대법원 심리 기간이 매우 짧았고 2심 판결의 완성도가 매우 높았다”고 했다. 파기환송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의 가능성이 없다”며 “파기환송을 하기에는 심리 기간이 매우 짧다”고 답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지나치게 빨리 잡은 감이 있다”며 “대선 전에 사건을 빠르게 정리한다는 차원에서는 이해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파기 환송·파기 자판)는 매우 지나치게 무리를 하는 것이라 불가능하다”며 “무죄를 확정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또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론과 별도

로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상고 기간 여부만 빠르게 판단하고 대선 전에 빨리 정리해서 (헌법 84조) 기준을 정해주겠다는 관점이 이런 이해가 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당내에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판결은) 잘 나올 것이다. (무죄 외에) 다른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배임·뇌물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로부터 ‘대법원 선고 날짜가 정해졌는데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있다’는 질문을 받고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짧게 답했다. /뉴시스

민주 총괄선대위 오늘 출범

공동 위원장에 박찬대·김부겸·김경수

강금실·윤여준·정은경 등 6명 확정

문재인 정부 출신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한다. 민주당은 정 전 청장을 포함해 총 6명의 공동 총괄선대위원장을 확정했다. 2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선대위를 이끌 총괄사령탑 인선을 마무리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원내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정은경 전 청장 등 6명이 공동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는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2시 선대위 출범식을 가진다. /뉴시스

코로나19 방역 총책임자로 활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은 202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정 전 청장 차출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 경선상대였던 김지사와 대선 출마를 검토했던 김 전 총리도 고심 끝에 선대위 합류 제안을 이날 오후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장관은 전남 총괄선대위원장직 수락 의사를 당에 전달했고, 윤 전 장관도 일찌감치 선대위 합류를 확정지었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2시 선대위 출범식을 가진다. /뉴시스

도, 국·과장급 포함 승진 내정 10명 발표

5월 수시인사 단행… 국장급 승진에 이순택 안전정책과장



이순택

전북특별자치도가 29일 2025년 5월 수시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총 10명의 승진 내정자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휴직 및 퇴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장급 1명과 과장급 1명을 포함해 조직 안정과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이번 인사에서는 관리자로서의 지도력과 업무 능력,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팀장급 이하에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와 함께 부서 간 균형, 양성평등, 소수직렬 배려 등을 반영했다. 이번 승진 인사는 직급별로 국장급 1명, 과장급 1명, 팀장급 4명, 6급 이하 4명 등 총 10명 규모로 이뤄졌다. 이중 국장급(3급) 승진 내정자로는 이순택 안전정책과장이 발탁됐다. 이 내정자는 관광산업과장과, 남원 부시장을 역임했다. 과장급(4급)에는 이성철 체육정책과 체육시설관리팀장 등 1명이다. 이외, 팀장급(5급) 승진자는 △김영욱(스마트농산과) △박해영(보건의료과) △김원태(물통합관리과) △이병석(교통정책과) 등 4명이다. 6급 승진자는 △이은지(자치경찰행정과) △조성진(총무과) △임태성(스마트농산과) 등 3명이며, 7급 승진자는 정희찬(축산연구소) 등 1명이다. /이만호 기자



군산시의회 의원과 전북서부환경노조, 어촌계 등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가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앞에서 군산새만금신항 원포인트 무역항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도의회 예결위,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

도정 현안 정책질의 시작으로 내달 2일까지 진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고창1)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한다. 전북자치도는 본예산 대비 2,522억원이 증액된 10조9,800억원 규모로, 전북자치도교육청은 본예산 대비 1,506억원이 증가한 4조7,238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29일 오전부터 경제부지사의 제안설명 청취와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정책질의에서 정중복 의원은

“‘지역소멸’이라는 용어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는 만큼, 보다 긍정적인 표현인 ‘지역상생’이나 ‘지역활성화’ 등으로의 용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타 시도와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의 미래를 대비한 산업 전략이 부족하다”며, “오가노디드, 의료용 대마 등 미래 신산업에 대한 준비와 함께 전략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영숙 의원은 “이번 추경에 보조금 반환 수입 376억 원을 반영했지만, 결산에서는 563억 원이 예상되고 있어 양자 간 차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예산

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물론, 추경에도 정확히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세입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꼼꼼한 관리와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내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관법) 시행 전까지는 시외버스 운행 지원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세입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위원장은 보조금 반환수입과 관련해 “대부분 시군이 부과 건수와 부과액의 모두 90% 이상의 수납률을 기록한 반면, 전주시는 337건 중 52건을 수납하고, 부과액 69억원 중 14억 원만 수납해 각각 15%와 21%에 그치는 등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 차원에서 보조금을 사업별로 상계하는 방안 등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만호 기자

“도민 뜻 모아 사회대개혁… 1만 도민 설문조사 돌입”

전북개헌운동본부

전북개헌운동본부가 29일 오전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대개혁을 위한 ‘1만 전북도민 설문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북개헌운동본부 소속 단체 회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박상준 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송미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연합 회장, 노병삼 참교육동지회 대표 등이 발언에 나섰다. 기자회견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과 기희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연합 사무처장이 돌아가며 낭독했다.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윤석열 전 대



통령의 파면은 국민의 힘으로 일군 승리”라며, “이제 그 에너지를 사회대개혁으로 이어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 사회 전반의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29일부터 5월 25일까지 온라인(구글폼)과 오프라인(사업장, 시내 주요 거점)에서 병행해 진행된다. 운동본부는 노동, 농업, 복지, 경제, 평화 등 주요 분야에서 도민이 직접 개혁과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구성했

다고 설명했다.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이번 설문문을 통해 △비정규직 철폐 △노동 기본권 보장 △식량주권과 농민 권리 강화 △재벌 개혁 및 경제 불평등 해소 △의료·주거·교육 공공성 확대 △차별 철폐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 등 총 22개 사회대개혁 과제를 마련했다. 이들은 “도민이 함께 만든 개혁과제를 차기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반드시 이행하도록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고, 또한 “헌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윤석열 퇴진북운동본부가 조직전환한 단체다. 일부 단체는 탄핵 이후 활동을 종료했으며, 나머지 단체들은 사회개혁 운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만호 기자

군산시민 300여명 “새만금신항 원포인트 무역항으로 지정하라”

군산시민과 어업인 등 300여 명이 29일 세종시에 위치한 해양수산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새만금신항을 군산항과 통합한 ‘원포인트 무역항’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주최로 진행됐으며, 군산시의회 의원, 전북서부환경노조, 수협, 어촌계 등 지역 주요 단체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군산 어민들이 큰 희생을 감내해 왔으며, 이제는 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항만 경쟁력 강화와 어업 생존권 보호를 위해 새만금신항의 원포인트 무역항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정책적 타당성과 행정 현실에 기반한 결정을 요구하며, 전북자치도에도 지역 갈등 해소와 상생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중앙항만정책심사위원회를 통해 새만금 신항의 운영 방식에 대한 최종 결정을 조만간 내릴 예정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가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서 제7선거구)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고, 지난 24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하고 최상의 상태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교육감의 책무 △3년마다 교육감의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계획 수립 △시행 △학교운동장 소재선정위원회 구성 △실태조사 △전북특별자치도 및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선관위, 정당 업무협의회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정당 업무협의를 각 정당의 전북도당 대표자 및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개최했다. 대선을 35일 앞두고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전북선관위는 대통령선거의 절차사무 주요 관리사항 및 각 정당별 조사사항, 회계보고 일정, 선거여론조사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각 정당 참석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선거관리 제도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만호 기자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상반기 주요사업장 방문

김제시의회(의장 서백현)는 지난 28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월 23일부터 진행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25일에는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의결하며 일정을 마쳤다. 특히 25일에는 김제시의회의 의원 전원과 1인 명예의원으로 위촉된 유봉영 공덕면 이장협의회장, 최선열 성덕면 주민자치위원장, 최영구 진봉면 이장협의회장이 동행하여 하동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장, 김제우식병원, 꽃밭체육 문화공간 등 주요 사업장 6개소를

순차 방문했다. 명예의원들은 3개소까지 함께하며 시민의 시각에서 현장을 살폈으며, 이후에는 김제시의원들이 나머지 사업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 중심 정책 추진 기반을 다지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폐교 활용 방안과 대책 마련 촉구(오승경 의원), 김제시 관광 자원 활용 방안 제안(이병철 의원), 농요(農謠) 보존·계승 대책 주문, 마을 건강 지킴이 버스 정책 제안,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및 공공 배달앱 도입 정책 제안(김승일 의원) 등 총 4건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김제=곽노태 기자

고창군의회, 담배 제조물 결합 인정 등 결의안 채택

임시회 본회의서… 일정 마무리

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는 29일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제31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발효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센터 조성사업’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노들골 꽃정원 조성사업’ 현장까지 4일간 주요사업장 14개소를 방문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세밀히 점검하는 한편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조민규 의원), 고창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임정호 의원),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표발의: 이선덕 의원) 등 3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고창군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박성만 의원) 등 7

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고창군 발효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 등이 통과됐다. 한편, 고창군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오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합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고창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담배 제조사는 제품 내 모든 유해 성분 및 건강 위해 요소를 명확히 표기하지 않은 ‘제조물 표시상의 결합’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담배 제조사는 흡연의 유해성으로부터 기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흡연으로 발생하는 여러 직·간접적 피해에 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 △중증정부 및 고창군청 관계기관은 국민 건강증진 책임을 위해 관련 법률 및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등에 따른 금연 환경 조성의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고창=김영식 기자